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9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b>제1장 총칙</b>		
<b>제1조(목적)</b>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b>제3조(책임)</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본조신설 2012. 1. 26.]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6. 21.>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6. 21.>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본조신설 2012. 4. 20.]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 24., 2011. 6. 7., 2014. 1. 28.>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제2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4. 20.>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간사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2013. 3. 23.>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 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 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청에 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도의 교육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 2. 23., 2013. 3. 23.>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2005. 2. 24.)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p>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 5. 31.]</p>	
<p><b>제6조(유아교육진흥원)</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0. 3. 24., 2012. 3. 21.&gt;</p> <p>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 3. 24.&gt;</p>	<p><b>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b></p> <p>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1. 30.]</p> <p><b>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b>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 3. 23.&gt;</p> <p>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 3. 23.&gt;</p> <p>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추진계획서</li> <li>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li> <li>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전문개정 2010. 5. 31.]</p>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3.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0. 3. 24.>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7. 6. 20.]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에 관한 지표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산출·관리·활용·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중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0. 9. 22.>]

**제7조의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

<p>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20. 3. 24.&gt; [본조신설 2017. 3. 21.]</p>	<p>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lt;개정 2020. 9.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li> <li>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li> <li>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li> </ol> <p>[본조신설 2017. 6. 20.] [제7조의4에서 이동 &lt;2020. 9. 22.&gt;]</p>	
<p><b>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b></p>		
<p><b>제7조(유치원의 구분)</b>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li> <li>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li> <li>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li> </ol>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2020. 1. 29.,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번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 8. 6.>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19. 8.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li> <li>2. 목적</li> <li>3. 명칭</li> <li>4. 위치</li> <li>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 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li> <li>6. 교지·실습지의 지적도</li> <li>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li> <li>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lt;개정 2019. 8. 6.&gt;</li> <li>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신설 2018. 3. 13., 2019. 8. 6., 2021. 7. 13.&gt;</li> <li>1. 유치원의 폐쇄: 60일</li> <li>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li> <li>3.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변경: 15일</li> </ol> <p>[전문개정 2015. 1. 6.]</p>	
<p><b>제8조의2(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li> <li>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li> <li>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li> <li>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li> </ol> <p>[본조신설 2020. 1. 29.]</p>		

<p><b>제8조의3(교육명령)</b>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1. 29.]</p>		<p><b>제2조의5(교육명령)</b>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lt;개정 2021. 7. 16.&gt;</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lt;개정 2021. 7.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li> <li>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li> <li>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p> <p>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lt;개정 2021. 7. 16.&gt;</p> <p>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1. 7.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사수당</li> <li>2. 교육교재 비용</li> <li>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li> </ol> <p>[본조신설 2020. 7. 30.] [중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lt;2020. 7. 30.&gt;]</p>
<p><b>제9조(유치원의 병설)</b>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p>	<p><b>제22조의11(소위원회)</b>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20. 2. 25.&gt;</p> <p>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2. 25.&gt;</p> <p>[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10에서 이동, 중전 제22조의11은 제22조의12로 이동 &lt;2017. 6. 13.&gt;]</p>	

<p><b>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b>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8., 2017. 12. 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li> <li>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li> <li>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li> <li>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li> <li>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li> </ol> <p>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p>	<p><b>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b>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p>	
<p><b>제10조(유치원규칙)</b>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16. 5. 29.&gt;</p> <p>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b>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9. 8.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li> <li>2. 학급편제 및 정원</li> <li>3. 교육 내용</li> <li>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li> <li>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li> <li>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li> </ol> <p>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li> <li>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li> <li>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할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lt;개정 2019. 8. 6.&gt; [전문개정 2015. 11. 30.]</p>	
<p><b>제11조(입학)</b>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lt;개정 2010. 3. 24., 2016. 5. 29.&gt;</p> <p>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lt;신설 2016. 5. 29.&gt;</p> <p>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lt;신설 2016. 5. 29.&gt; [제목개정 2016. 5. 29.]</p>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20. 6. 23., 2020. 8. 14.>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20. 6. 23.]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 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5. 31.]

<p><b>제13조(교육과정 등)</b>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lt;개정 2012. 3. 21.&gt;</p> <p>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lt;신설 2021. 7. 20.&gt;</p> <p>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gt;</p> <p>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gt;</p>		
<p><b>제14조(유치원생활기록)</b>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b>제15조(특수학교 등)</b>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 2010. 3. 24.&gt;</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 통합 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t;개정 2010. 3. 24.&gt;</p>	<p><b>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b>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p>	
<p><b>제16조(외국인유치원)</b>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6. 5. 29.&gt;</p> <p>②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0. 3. 24.&gt;</p>	<p><b>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b>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b>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10. 3. 24., 2021. 6. 8.&gt;</p> <p>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 6. 8.&gt;</p> <p>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 3. 24., 2021. 6. 8.&gt;</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21. 6. 8.&gt;</p>		<p><b>제2조의6(건강검진)</b>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lt;개정 2020. 2. 27., 2020. 7. 30., 2022. 6. 29.&gt;</p> <p>1. 삭제 &lt;2022. 6. 29.&gt;</p> <p>2. 삭제 &lt;2022. 6. 29.&gt;</p> <p>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lt;개정 2022. 6. 29.&gt;</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2020. 2. 27.&gt;</p> <p>④ 삭제 &lt;2020. 4. 27.&gt;</p> <p>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lt;개정 2022. 6. 29.&gt;</p> <p>⑥ 삭제 &lt;2022. 6. 29.&gt;</p> <p>[전문개정 2013. 12. 10.]</p> <p>[제2조의5에서 이동 &lt;2020. 7. 30.&gt;]</p> <p><b>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b>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b>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b></p> <p>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치원에 대한 감독·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li> <li>3.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li> <li>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li> </ol> <p>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2. 3. 21.]</p>		



<p><b>제17조의3(응급조치)</b>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p>		
<p><b>제18조(지도·감독)</b>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gt;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gt;</p>	<p><b>제19조(장학지도)</b>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1. 26., 2020. 1. 29.>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 2. 25.>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8. 31., 2013. 3. 23., 2019. 8. 6.>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3. 유치원의 설립·운영  
 4.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5.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6.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7.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4. 20.]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식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0.,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2. 4. 20.,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

	<p>을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lt;개정 2012. 4. 20., 2013. 3. 23.&gt;</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lt;개정 2012. 4. 20., 2013. 3. 23.&gt;</p> <p>[전문개정 2010. 5. 31.]</p>	
--	---	--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 29.>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정보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2. 3. 21.]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0.,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2. 4. 20.,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p>2012. 8. 31., 2013. 3. 23., 2017. 6. 20., 2020. 9. 22.&gt;</p> <p>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무</p> <p>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p> <p>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p> <p>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lt;개정 2022. 6. 21.&gt;</p> <p>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p> <p>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p> <p>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lt;개정 2022. 6. 21.&gt;</p> <p>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p> <p>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p> <p>④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lt;신설 2022. 6. 21.&gt;</p> <p>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p> <p>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lt;신설 2014. 8. 6., 2022. 6. 21.&gt;</p> <p>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p> <p>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p> <p>[본조신설 2012. 1. 6.]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 3은 제34조의4로 이동 &lt;2022. 6. 21.&gt;]</p>	
--	---	--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창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12. 22.>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0. 12. 22.>

[본조신설 2012. 3. 21.]  
[제목개정 2020. 12. 22.]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  
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  
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  
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  
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20. 7. 2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  
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  
4는 제22조의5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  
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  
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  
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  
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  
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  
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2020. 7.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  
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  
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  
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  
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 및 제22조  
의10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  
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도의 조  
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 <개정 2017. 6. 13., 2020. 4. 7., 2020.  
7. 28.>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  
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  
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2. 8. 31.]  
[제목개정 2017. 6. 13.]  
[제22조의13에서 이동 <2020. 4. 7.>]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10(심의결과와 시행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③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7.>  
[본조신설 2012. 8. 31.]  
[제목개정 2020. 4. 7.]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2017. 6. 13.>]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의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5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

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20. 4.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17. 6. 13.>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6.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6. 13., 2020. 4. 7.>

⑦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20. 4. 7.>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7(회의 소집)**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  
7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 등을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13.]  
[종전 제22조의9는 제22조의10으로 이동 <2017. 6. 13.>]

**제22조의10(심의결과와 시행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③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

	<p>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lt;신설 2020. 4. 7.&gt;  [본조신설 2012. 8. 31.]  [제목개정 2020. 4. 7.]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 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lt;2017. 6. 13.&gt;]</p> <p><b>제22조의11(소위원회)</b>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lt;개정 2020. 2. 25.&gt;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lt;개정 2020. 2. 25.&gt;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 11은 제22조의12로 이동 &lt;2017. 6. 13.&gt;]</p>	
<p><b>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b>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p>		



<p><b>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b> ① 국·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p> <p>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li> <li>4. 사용료 및 수수료</li> <li>5. 이월금</li> <li>6. 물품매각대금</li> <li>7. 그 밖의 수입</li> </ol> <p>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 [본조신설 2012. 3. 21.]</p>		
<p><b>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b>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p> <p>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p> <p>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직원 등의 인건비</li> <li>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li> <li>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li> <li>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li> <li>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li> </ol> <p>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 [본조신설 2012. 3. 21.]</p>		
<p><b>제3장 교직원</b></p>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1. 30.>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이상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5.]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p><b>제21조(교직원의 임무)</b>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lt;개정 2010. 3. 24., 2021. 3. 23.&gt;</p> <p>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lt;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gt;</p> <p>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lt;신설 2011. 7. 25.&gt;</p> <p>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lt;개정 2010. 3. 24., 2011. 7. 25.&gt;</p> <p>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lt;개정 2011. 7. 25., 2012. 1. 26.&gt;</p>		
<p><b>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b>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lt;개정 2020. 1. 29.&gt; [본조신설 2016. 5. 29.]</p>		
<p><b>제22조(교원의 자격)</b>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gt;</p> <p>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lt;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gt;</p> <p>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lt;신설 2011. 7. 25., 2013. 3. 23.&gt;</p> <p>④ 삭제 &lt;2010. 3. 24.&gt;</p> <p>⑤ 삭제 &lt;2010. 3. 24.&gt;</p>	<p><b>제26조(교원의 자격)</b>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li> <li>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li> <li>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li> <li>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li> </ol> <p>[본조신설 2020. 12. 22.]</p>		
<p><b>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b>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p>		
<p><b>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b>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p><b>제22조의5(자격취소 등)</b>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li> <li>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p> <p>[본조신설 2020. 12. 22.]</p>		
<p><b>제23조(강사 등)</b>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lt;개정 2010. 3. 24., 2011. 5. 19., 2012. 1. 26.&gt;</p> <p>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 3. 24.&gt;</p>	<p><b>제27조(강사 등)</b>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b>제4장 비용</b></p>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학년제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31., 2013. 3. 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2. 8. 31.]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4., 2020. 2. 27.>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등을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7.>  
 ③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7.>  
 ④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2021. 7. 16.>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⑥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0. 2.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7.>

	<p>[전문개정 2013. 2. 23.]</p> <p><b>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b>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학금</li> <li>2. 수업료</li> <li>3. 급식비</li> <li>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li> </ol> <p>[본조신설 2013. 2. 23.]</p> <p><b>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b>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li> <li>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li> <li>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li> </ol> <p>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 절차·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lt;개정 2013. 3. 23.&gt;</p> <p>[본조신설 2013. 2. 23.]</p> <p><b>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b>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lt;개정 2013. 2. 23., 2013. 3. 23.&gt;</p> <p>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 6. 8.]</p> <p>[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2005. 2. 24.)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p>
--	--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15. 3. 27.>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 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 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 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3. 27.>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급대상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31.]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2. 23., 2013. 12. 10., 2015. 10. 7.>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읍·면·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읍·면·동을 말한다) 한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할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2.]  
[제목개정 2015. 10. 7.]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30일 전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에 근거서류를 갖추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7.]

<p><b>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b> 삭제 &lt;2012. 3. 21.&gt;  <b>②</b> 삭제 &lt;2012. 3. 21.&gt;  <b>③</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lt;개정 2010. 3. 24.&gt;</p>	<p><b>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b>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lt;개정 2011. 10. 25., 2013. 3. 23.&gt;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b>②</b>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2. 4. 20.&gt;  [전문개정 2010. 5. 31.]</p>	
제26조의2 삭제		
제26조의3 삭제		
제26조의4 삭제		
제26조의5 삭제		
<p><b>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b>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2. 4. 20., 2013. 3. 23.&gt;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b>②</b>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2. 4. 20.&gt;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2. 4. 20.]</p>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5. 3. 27., 2020. 1. 29.>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치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2. 3. 21.>  
[제목개정 2020. 1. 29.]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24.]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2021. 7. 13.>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의 자격 검정·수여  
 ② 삭제 <2012. 8. 31.>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 9. 30., 2012. 4. 20., 2012. 8. 31.>  
 ④ 삭제 <2012. 8. 31.>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2. 4. 20., 2012. 8. 31.,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4., 2020. 2. 27.>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등을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7.>  
 ③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7.>  
 ④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의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2021. 7. 16.>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⑥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0. 2.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7.>

		<a href="#">[전문개정 2013. 2. 23.]</a>
--	--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5. 2. 3., 2015. 3. 27., 2016. 5. 29., 2020. 5. 26.>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5. 3. 27., 2020. 1. 29.>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2020. 7.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2020. 7. 28.>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2. 8. 31.]

[제목개정 2017. 6. 13.]

[제22조의13에서 이동 <2020. 4. 7.>]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b>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b>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1. 29.]</p>	<p><b>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b>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유치원의 위치</li> <li>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li> <li>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 다.</li> <li>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li> <li>4.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li> </ol> <p>[본조신설 2020. 7. 28.]</p>	<p><b>제11조(공표대상 금액)</b>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 받은 보조금·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li> <li>2.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 받은 보조금·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li> <li>3. 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li> </ol> <p>[본조신설 2020. 7. 30.]</p>
<p><b>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b>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3. 24.&gt;</p> <p>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 3. 24.&gt;</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lt;개정 2010. 3. 24.&gt;</p>		



<p><b>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b>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2010. 3. 24., 2016. 5. 29., 2020. 1. 29.&gt;</p> <p>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p> <p>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2의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p> <p>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2010. 3. 24., 2012. 3. 21.&gt;</p> <p>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lt;신설 2015. 2. 3.&gt; [제목개정 2015. 2. 3.]</p> <p><b>제33조(청문)</b>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lt;신설 2020. 12. 22.&gt;</p> <p>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lt;개정 2010. 3. 24., 2016. 5. 29., 2020. 12. 22.&gt;</p>	<p><b>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b>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2016. 6. 21., 2019. 8. 6.&gt;</p> <p>②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lt;신설 2019. 8. 6.&gt;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9. 8. 6.]</p>	<p><b>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b>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p>
---	--	---

<p><b>제34조(벌칙)</b> ① 삭제 &lt;2012. 3. 21.&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6. 5. 29.&gt;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6. 5. 29., 2020. 12. 22.&gt;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b>제35조(과태료)</b>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t;신설 2013. 5. 22.&g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lt;개정 2013. 5. 22.&gt;          [본조신설 2012. 3. 21.]</p>	<p><b>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